

‘단일대오 재정비’ 민주, 檢·한동훈 맹공

이재명, 檢개혁 토론회서 “檢,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략” ‘방탄 논란’ 차단도 주력... “檢 행태에 압도적 반대로 부결” 이재명, 김경수와 통화·김근태 추모미사 참석 ‘당 결속 홍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날 ‘노용래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폭제로 삼아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선 민주당의 단일대오 전열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하면서 대대적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불공정 수사 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략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검 등 검찰과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

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도 맹공을 가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단순히 체포동의안 요청 경위를 설명한 반면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가결을 압박했다는 비판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은 검찰이 노 의원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물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구 꺼냈다”며 “일종의 언론플레이였다. 한 장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의 어제 설명 중 ‘특수 검사로서의 경험, 확실, 상식’ 등과 같은 한참 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날날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21대 국회 첫 사례인 데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높은 만큼 ‘방탄 논란’ 확산에는 강한 방어막을 쳤다.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탄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면서도 “(무엇보다) 검찰이 더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방탄이 아니냐고 들 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했다”며 “압도적 반대

로 부결이 된 것은 그만큼 많은 의원이 검찰 수사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정치인 한동훈의 계략이 여실히 드러났다. 체포안을 부결시켜서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들려는 술수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향후 당내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는 출소 당일 김 전 지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최근 정태호 의원을 민주당 구원장에 앉히는 등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결합 행보에 나선 터라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서 경남도 당에 김 전 지사의 새 연락처를 물어왔고, 통화도 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안부 차원의 대화 정도만 이뤄지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이날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추모 미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도 당의 결속 도모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추모사에서 “수십 년간 김 전 의장과 같은 분들의 희생과 고충 속에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저희 모두가 김근태가 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추모 미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뉴스

“역사왜곡·독재찬양 김광동 사퇴해야”

이형석, 국회 본회의의 5분 발언 통해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군부독재를 찬양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광동씨는 정부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5·18 정신을 폄하하고 광우를 모욕했다”며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우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김씨는 제3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했다”며 “김씨는 좌우 이념 대립의 틀바구니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민족사적 비극의 피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고 4·3 추념식에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김광동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김씨는 ‘4·19도 밭 달라고 우는 백성의 얘기’라며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수록된 시민혁명 4·19 가치마저 폄하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르면,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명시돼 있으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실화해위를 설치한다(제3조)고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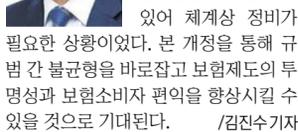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매몰돼 있는 김광동씨가 위원장 자리를 지킨다면, 진실화해위는 형해화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들은 은폐된 채 묻힐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부정하는 김광동씨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민형배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은 2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제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기자



野, ‘北무인기’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대외 공세 고삐를 조였다.

이번 사태를 총체적 작전 실패로 규정하면서 현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고 안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 국민안전은 각자도생으로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국가 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건가”라며 “윤

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수도권 영공이 맥없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김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무인기 제원도 파악이 안 되고, 대응을 위해 출동한 비행기는 추락한 총체적 안보 무능”이라며 “국민이 군을 믿고 밤에 제대로 자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무인기 침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4대 지방협의회 회장단과 만찬을 한 것을 두고도 “안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힘 당협 위원장에 광주·전남 출신 약진

김경진 동대문을·전주에 강동갑·유종필 관악갑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 후보로 속속 선정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경쟁력강화특위(조직특위)는 사고 당협 68곳 중 40여곳의 조직위원장 후보를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정자 명단을 이날 지도부에 전달했다.

조직위원장은 지역당 조직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다.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선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임공보특별단장을 지낸 전남 장성 출신의 김경진 전 의원은 비례대표 허은의 의원을 꺾고 동대문을에 내정됐다.

허 의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해 다시 심사를 받고 고베를 마시게 됐다.

광주 출신으로 전석홍 전 전남지사의

말인 전주에 의원(비례)은 윤희석 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을 꺾고 서울 강동갑에 내정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함평 출신의 유종필 전 국회의도서관장은 서울 관악갑에 내정됐다.

한편, 광주 출신의 심재철 전 의원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선정했지만 조강특위 심사 결과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